

해진공,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 속도… 2231억 펀드 출범

블라인드 펀드, 존속 기간 15년
BNK부산·신한은행 공동 출자
NH농협은행과 해양 금융지원 협력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200억 원대 규모의 국내 항만·물류인프라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또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화 목적의 선박금융·신용보증 지원에도 나선다.

23일 해진공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는 해진공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성되는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 특화 블라인드 펀드다.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금을 먼저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 상황에 맞춰 유망 사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진공의 지원은 그간 물류센터·항만 시설 등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금융 지원이 주를 이뤘다. 이번 펀드 출범을 계기로 항만배후단지, 물류시설, 하역설비 등 국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 약정식을 갖고 있다.

/해진공

내 핵심 물류 기반시설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펀드 조성 규모는 총 2231억 원이다. 해진공이 최대 출자자이고 BNK부산은행과 신한은행이 공동 출자기관으로 참여한다. 또 이지스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이 공동 운용사를 맡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펀드의 존속 기간은 15년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 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축된 민간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해진공의 천용건 해양금융본부장은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는 국가 공급망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지만 장기 투자 자금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해진공은 이번 펀드를 통해 국가 물류망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과 함께 미래 물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세계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위험 증대 등으로 국가 물류망 안정성과 공급망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해진공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

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19일에는 부산 해진공 본사에서 NH농협은행과 해양산업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선박금융, 신용보증 지원 ▲해운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해양산업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해진공 발행 채권 인수 등 3개 분야 중심의 협력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해진공의 해양금융 전문성과 농협은행의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결합한다. 이를 통해 해운·항만·물류 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이에,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담보 부족이나 금융 정보 부족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해양기업들이 보다 폭넓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변동과 해운시장 불확실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양산업의 경쟁력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진공은 농협은행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가사노동 정점 37세→40세 늦춰졌다

혼인·출산 시기 늦춰진 영향
부담 연령대도 35~54세로 이동

이른바 '가사노동 생산'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나이는 4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혼인·출산 시기의 지연에 따라 자녀 돌봄과 가사노동 부담이 정점을 찍는 시기가 5년 전에 비해 3년 늦춰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가사노동 생산액이 40세에 187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에는 37세였으나 5년 사이 3년 밀렸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이란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 준비와 청소, 빨래, 자녀 돌봄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연령별·성별로 분석한 통계를 말한다. 누가 가사노동을 많이 하고, 누가 가사노동의 혜택을 받는지 보여준다.

가사노동 생산은 15세부터 증가해 30~40대에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후 감소하다가 은퇴 후 가정관리 시간 증가와 손자녀 돌봄 등의 영향으로 다시 늘어나는 M



지난달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

/뉴시스

자형' 구조를 나타냈다.

아울러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시기 역시 이전과 비교해 늦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는 0세에 37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후 생산이 늘면서 28세에 흑자로 전환됐고 39세에 1035만 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82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는 개인이 받은 가사서비스 가치에서 직접 수행한 가사노동 가치를 뺀 금액이다. 생산이 소비보다 많으면 흑자, 소비가 생산보다 많으면 적자로 본다.

가사노동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기간은 남성이 32세부터 43세까지 12년이 었다. 2019년 8년보다 4년 늘었다. 여성은 26세부터 83세까지 58년이 었다.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연령대는 25~44세에서 35~54세로 이동했다. 특히 출산과 육아 비중이 높은 35~44세 연령층은 66조3000억 원 규모의 가사노동 흑자를 기록했다. 이들이 생산한 가사노동은 자녀 돌봄을 중심으로 가구 내 이전 형태로 유년층에 전달됐다. 유년층은 생산 없이 소비만 이뤄져 116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쿠광, 30억 상생안으로 거래관행 개선

PB 협력사 최소 생산물량 보장
공정위원회 동의의결안 확정

쿠광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조를 위탁받는 하도급업체들이 앞으로 계약서에 최소 생산 물량과 관촉비 분담 비율을 명확히 보장받게 된다. 하도급업체에 서면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관촉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깎아 '갑질 논란'을 빚은 쿠광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3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하게 됐다.

공정위는 쿠광과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나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장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쿠광 측이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하고,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 상품 관촉행사를 진행하며 공급단가를 부담하게 인하한 혐의를 조사 중이었다. 이에 쿠광 측은 지난해 3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최종안을 인용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쿠광 측은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확실치 처리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PB상품 출시 전 협의를 통해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제품 생산·입고 기간인 '리드타임'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단가 인하 압박의 통로가 됐던 관촉행사 시에도 수급사업자의 분담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관촉추진행사 부속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쿠광 측은 또 단가 인하 피해를 본 94개 업체에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는 등 상품 개발 및 납품 비용으로 10.5억 원을 직접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출연연 연구자 강연료 상한 2.5배 인상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행 40만원서 100만원으로 확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임직원들이 외부 강연이나 강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이 현행 1시간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그동안 대학교수 등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제기되어 온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임직원의 외부강연 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장과 임직원이다.

그동안 이들이 외부강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은 1시간당 40만 원, 강의

가 길어져도 하루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반면 청탁금지법상 대학교수나 교사 등은 유사한 전문성을 지녔음에도 1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출연연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시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 심의 당시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와 대학교 등의 교원 간에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연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과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개정을 추진해 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협, 전국 단위 농촌 일손지원 실시

약 1만8000여 명 참여

농협중앙회는 전국 단위 '범농협 농촌 일손 집중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시작된 지원은 25일까지 총 2주간 진행된다.

전국 각지의 범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대학생, 자원봉사자, 기업체 봉사단 등 약 1만800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19일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강원 평창 대관령 소재 농가를 찾아, 무과작업·양상추 모종 심기 등 농작업 일손을 보탤다. 강 회장은 "6월은 '부지깽이

도 일어나 일손을 돕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업인들의 일손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라며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이상 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범농협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은 올해 유무상 영농인력 260만 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시·도형 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영농인력공유를 공유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은퇴자와 전업주부 등 유유인력을 도시농협을 통해 모집·연계하는 '농협도농인력 이음'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